중대재해 이후, 남은 사람들의 애도와 기억을 위하여

이주연 회원, 상담심리사, 연구자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6조-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죽음은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 남겨진 사람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관계 앞에 서게 된다. 애도는 그 단절 앞에서 일어나 삶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다.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타인과 나누면서, 남겨진 사람은 끊어진 관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중대재해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동료를 잃어버린 경험을 넘어, 안전한 자신, 안전한 타인, 안전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세계를 애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로 인해 맞닥뜨린 죽음과 안전한 세계의 상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안전이 권리가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되어 사람이 소모품으로 대우받고 부품처럼 교체되는 구조 속에서,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고된 일터. 죽음은 이러한 현실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현재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료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일이 되며, 동시에 자신을 다음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된다. 수용은 윤리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닿기 어려운 자리에 놓인다. 수용이 이처럼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면, 이 차단을 풀어내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은 계속되는 고통으로

"왜?"라는 질문은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

는 근본적인 방법이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그래서 남은 이들의 시간에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된다. 비극에 함몰되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재난에서 유족들의 애도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구라는 사회적 형태를 띠는 것은, 그저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억울하게 떠난 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점이면서, 나의 일과 일터에서 과거와 다른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본에게 노동자의 죽음은 처리해야 하는 절차이고, 잘 넘겨야 하는 위기일 뿐이다. 그 절차는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집중될 뿐이다. 사람의 죽음은 자료로 다뤄지고, 남겨진 동료들은 사고 목격자 혹은 재발방지 교육의 대상 등으로 범주화된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동료들은 죽은 동료와 맺었던 인격적 관계를 박탈당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 역할을 강요받는다. 슬픔을 느끼는 애도자가 아니라, 절차를 완수해야 하는 도구가 된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기억이 쌓은 체험의 집합체이다. 그 공간을 심리적이건 물리적이건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은, 과거의 세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나의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내가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때만, 생산의 효율에만 맞춰져 있던 시계가 비로소 작동을 멈춘다. 이제 인간의 시간을 돌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언제나 세계 속에 몸으로 존재한다

중대재해가 다른 재난과 다른 점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재난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사고 발생 장소인 일터를 떠날 수가 없기에 사고 경험에 반복적으로 재노출되는 경험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뇌는 특정 경험에 대해 관련된 상황이나 장소에 신체적 감정의 꼬리표인 '신체 표지(somatic marker)'를 붙인다. 우리는 환경을 순수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지를 통해 먼저 느끼고 그다음에 알게 된다.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왠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몸이 그 공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신체 표지는 본래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 사람이 죽어간 일터에서, 그리고 그다음은 나 혹은 다른 동료들

이 될지도 모르는 일터에서 신체 표지는 본래의 적응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본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몸의 반응에 따라 그 공간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야만 한다.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작업중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을 피하라'는 언어는 공허할 뿐이다. 몸이 보내는 안전 신호를 억지로 눌러 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있겠는가.

몸과 분리된 '의지'는 몸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몸을 잃는 것을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몸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다. 생존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하는 모순에 갇힌 인간이 어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진상규명은 이제까지 일터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해하고, 그 공간의 주인으로 서는 과정이다. 중대재해에서 경험한 충격을 '극복'하고 '적응'하면서 '위험에 사로잡힌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해체하고 안전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체험이 되어야 한다.

자본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기억을 짓기

세상이 무엇을 인정하고 기억하는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중대재해는 부주의한 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벌어진 사회적 참사이며, 남겨진 이들 또한 피해자이다.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자본은 죽음을 은폐, 축소, 왜곡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구조의 본질과 그 구조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잊어버릴 것을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낸 것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정적 결과(회사의 압박이든 동료들의 눈치든)를 걱정해 의도적으로 입을 닫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경험은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그 속에서 침묵은 어쩌면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서로에 대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진상규명은 이제까지 자본의 언어로 지어온 구조를 노동자들의 언어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자본의 언어는 현실을 은폐하는 수단이지만, 우리의 언어는 현실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진실이 없이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남은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있었던 자리와 흔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죽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슬픔이 공유되고, 애도가 머물면서, 망자를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의 상실이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시공간이다.

어쩌면 진상조사는 이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해 본다. 억울하게 죽은 이를 위로하고, 유족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 2020.8.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부정한 현실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희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남은 이들의 다짐과 애도와도 같은 것은 아닐까.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사람'이 있었던 흔적도 기억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서둘러서 치워져야 한다면, 그것은 떠난 이와 남은 이들 모두에게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그 속에서 슬픔과 위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진실 없는 위로는 허망할 뿐이며,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한때 삶을 공유했던 존재를 '위험'으로 기억하고 '교훈'으로 말해야 하는가. 애도도 권리이다.

함께 할수록 살아남는다

안전은 생존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내가 지금 안전한가?'를 24시간 확인하는 일종의 보안시스템 같은 것이다. 이 보안시스템은 생각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보안시스템은 무엇을 '안전하다'라고 판단할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문이 잠겨 있는지, 주변이 조용한지와 같은 물리적 신호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하는 신호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사람이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위협의 부재'보다 '연결된 존재'로 안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은 혼자 안전한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안전한 것을 진짜 안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심리적 외상의 치유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관계가 '치료 기법'이 아니라 치유 과정 그 자체이자 결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노동자가 주체가 된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조직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힘을 조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일터